

건설산업동향

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 및 퇴출시 개선 효과

이상호·이홍일

2005. 8. 12

▪ 연구의 배경	3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5
▪ 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결과	9
▪ 부실기업 퇴출시 정상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	14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

요 약

▶ 진입장벽 완화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현상의 이면에는 부실업체 수의 증대 수반

- 2000년, 2001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현상의 이면에는 정상업체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부실업체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
- 본 연구에서 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완화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에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였다가,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차츰 줄어들었음.
- 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업체 수가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18.6%를 차지했으며,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비중이 줄어들었음.

▶ 부실업체 퇴출 가정시 정상업체의 매출액 및 수익성 개선 효과

- 광의의 부실업체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와 서로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었음.
- 광의의 부실업체가 퇴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 1사당 연평균 17.4%의 매출액 개선 효과가 발생했고, 연평균 16.5%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했음.

▶ 부실업체 급증의 산업적 배경

- 건설산업은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하도급 관행의 존속, 낮은 기업유지비용,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무자격·부실업체가 진입하여 퇴출되지 않고 존속할 가능성이 높음.
-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의 개선없이 취해진 1999년 이후의 건설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는 부실 건설업체 수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무자격·부실업체가 건설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와 같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
- 무자격·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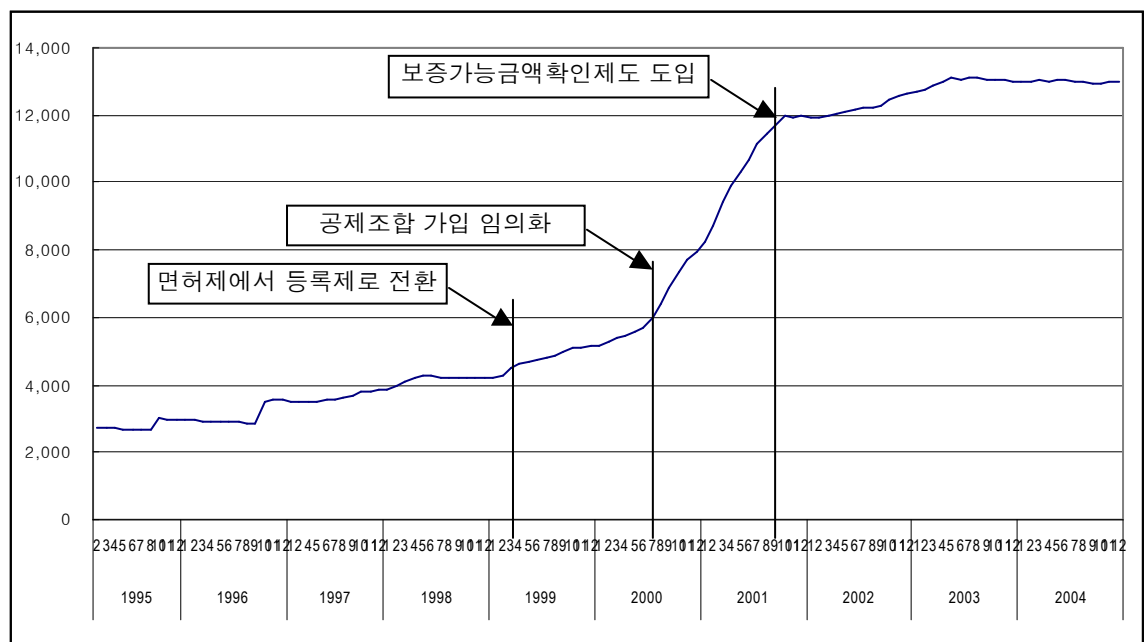
■ 연구의 배경 : 일반건설업체 수 증가 추이와 문제점

업체 수 증가 추이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등록제 전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적격업체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로 인해 2003년 8월 1만 3,119개사를 최고점으로 하여 조금씩 업체 수가 감소해 2004년 말 기준 1만 2,988개사를 기록하였음.

<그림 1> 월별 일반건설업체 수 추이

(단위 : 개사)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 각월호; CERIK, 「건설저널」 각월호

업체 수 급증의 배경과 문제점

-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에 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인하와 품질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 산업 내의 업체 수는 주로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와 수익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퇴출됨.
-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는 이러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하였고, 1999년과 2000년의 진입장벽 완화 이후에는 정산업체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했고, 부실업체의 퇴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무자격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 기술자 요건 등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정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업체를 말하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 3월까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가 총 2만 535개사(일반건설업체 4,141개사, 전문건설업체 1만 6,394개사)에 달하였을 정도로 많았음.
 - 부실업체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 경영 부실업체를 의미함.
- 요행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일괄하도급 관행의 존속 등이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 내에 진입하거나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
 - 신규 및 중소 건설업체의 주된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 공사는 사실상 요행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은커녕 등록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를 양산하는 사태를 낳게 되었음.
 - 낙찰 후 수주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관행의 존재도 무자격·부실업체에게 진입의 동기를 제공함은 물론 퇴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로 인한 매우 낮은 기업 유지비용, 무자격 또는 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과 같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건설시장에 진입한 무자격·부실업체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는 기업 유지비용이 미미하고, 시장에 잔류하면서 1건만 수주하면 그동안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윤이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국 건설업체 수 급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폐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업체들이 상당수 시장에 존속하면서 정상업체의 수주 및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일괄하도급과 같은 불법·탈법 행위를 조장해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건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임.
 - 무자격·부실업체는 현재와 같은 공공공사 입찰 시스템에서 ‘경쟁’ 메커니즘이 아니라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시공능력이 결여된 무자격업체와 경영상태가 악화된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나 부정·부패 및 불법·탈법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음.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 완화 이후 무자격·부실업체의 진입이 많았을 것이라는 가정과, 이에 따라 정상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일반건설업체의 재무 데이터를 기초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의 방법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를 표본으로 8년 간에 걸쳐 부실기업 수를 추정하고, 그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음.
-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는 사실상 행정력을 동원한 실태조사 외에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단, 소규모 일반건설업체 중 경영 부실업체는 기업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자 수 등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경영 부실업체 중 소규모 일반건설업체의 상당수는 무자격 업체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경영 부실업체는 무자격업체일 것으로 추정됨.
- 기업의 부실화 징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신용평점방법과 부도예측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8년 간에 걸쳐 일반건설업체의 부실업체 수 변화 추이를 추정하는 데는 방법론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IMF 이후 정부에서 부실기업 규제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을 활용하였음.
- 신용평점방법은 재무비율 등의 정량적 지표와 함께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기초로 각 지표의 평점을 부여한 이후 가중평균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질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채택할 수 없었음.
- 부도예측함수 이용법은 부도기업 집단과 정상기업 집단의 재무데이터를 기초로 통계분석을 실시해 판별함수를 도출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규모별 판별함수를 도출, 적용해야 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웠음.
- IMF 이후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와 이자보상배율을 제시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blacktriangle \text{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Delta \text{이자보상배율(배)}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 정부와 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기준으로 제시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에 대해서는 자본회임 기간 등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었음.
 - 1998년 말 정부는 30대 기업 구조조정 기준으로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 200%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2001년 8월 말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수익성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할지라도 그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산업의 특성상 자본회임 기간이 긴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기업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정부가 제시했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기준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협의)와 넓은 의미(=광의)의 2가지로 부실기업을 정의하였음.
 -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본 잠식 업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협의의 부실기업으로 정의했음.
 -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정상기업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협의의 부실기업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추가하여 광의의 부실기업으로 정의했음.
 - 광의의 부실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정상기업으로 정의했음. 즉,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닌 업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나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업체를 정상기업으로 정의했음.

-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의의 부실기업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만 포함시켜 너무나 대상을 좁게 규정했다는 한계가 있고, 광의의 부실기업에 포함된 부채비율 200% 이하이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한 해의 경영 성과만으로 부실기업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한계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의의 부실기업 정의는 정부에서 부실기업 규제, 곧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좁은 의미의 부실기업 분류 기준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부실업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협의의 부실기업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도 추가하여 광의의 부실기업으로 정의했으나,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차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이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단정짓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할 수 있음.
 -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공공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서라도 영업이익을 높게 계상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시각에서 볼 때는 비록 한 해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부실기업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음.
-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난 8년 동안 일반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 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보다 엄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신용평점방법이나 부도예측함수 이용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정부의 구조조정 기준을 활용하였음.

■ 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 결과

2003년도 부실 건설업체 수

- 대한건설협회에 2003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1만 1,160개사가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광의의 부실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3,330개사로 분석대상 일반건설업체의 29.8%에 달했으며, 협의의 부실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1,033개사로 분석대상 일반건설업체의 9.3%에 달하였음.
- 분석대상 기업 1만 1,160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는 461사이며, 자본잠식이 아닌 업체 중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2,570개사였으며, 부채비율 200% 초과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99개사였고, 이들을 모두 합한 광의의 부실기업 수는 총 3,330개사였음.

<표 1> 2003년도 부실기업 수 : 광의의 부실기업=3,330개사, 협의의 부실기업=1,033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 1 미만	1 이상	
자본 잠식		121 (1.08)	144 (1.29)	196 (1.76)	461 (4.13)
부채비율	200% 이하	2,297 (20.58)	3,179 (28.49)	4,238 (37.97)	9,714 (87.04)
	200% 초과	273 (2.45)	299 (2.68)	413 (3.70)	985 (8.83)
계		2,691 (24.11)	3,622 (32.46)	4,837 (43.43)	11,160 (100.00)

주 : 1.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 는 정상기업을 의미함.

- 일반건설업체를 자본금 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다섯 Group으로 분류하고, 이 Group별로 2003년의 부실기업 분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전체 그룹별로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은 적게는 23.4%, 많게는 42.4%에 달하였음.
 - group 1.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group 2. 자본금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group 3. 자본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group 4. 자본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group 5. 자본금 10억원 미만

<표 2> 자본금 규모별 정상기업의 분포(2003년)

(단위 : 개사, %)

구 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합계
분석대상 업체 수	36	109	114	4,158	6,743	11,160
광의의 부실기업 수	13	46	39	975	2,257	3,330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	36.1	42.2	34.2	23.4	33.5	29.8
협의의 부실기업 수	8	19	30	180	796	1,033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	22.2	17.4	26.3	4.3	11.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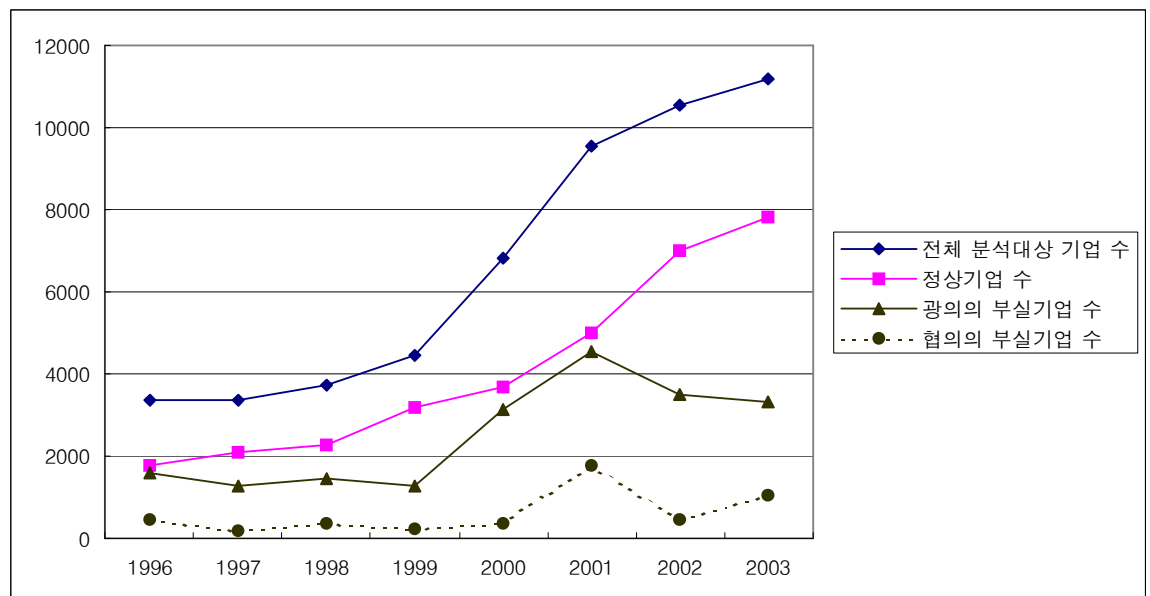
연도별 부실기업 수 변화 추이

○ 연도별 부실기업 수 변화 추이

- 연도별로 부실기업 수의 증가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00년과 2001년 전체 건설업체 수의 급증 현상에는 부실기업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1999년까지 전체 일반건설업체 수의 증가에는 부실기업 수의 증가보다는 정상기업 수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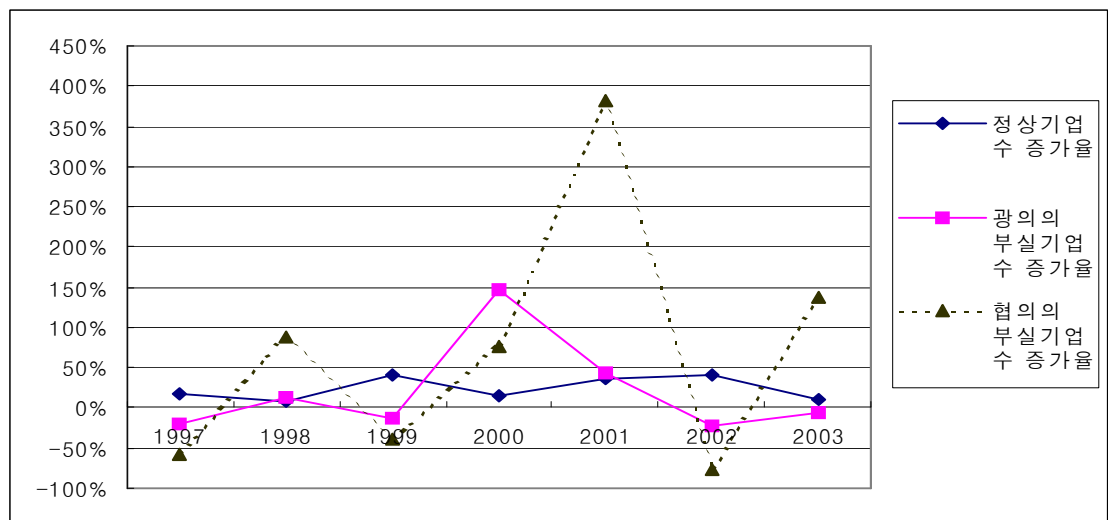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정상기업 수와 부실기업 수의 변화 추이

(단위: 개사)



- 본 연구에서 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수는 2000년과 2001년에 급증하다가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며, 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 수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급증하였다가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그 수가 줄어들었음
-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상기업 수 증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지만, 광의의 부실기업 수 증가율은 2000년과 2001년에 매우 높았고, 협의의 부실기업 수 증가율은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급증하였음.

<그림 3> 연도별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증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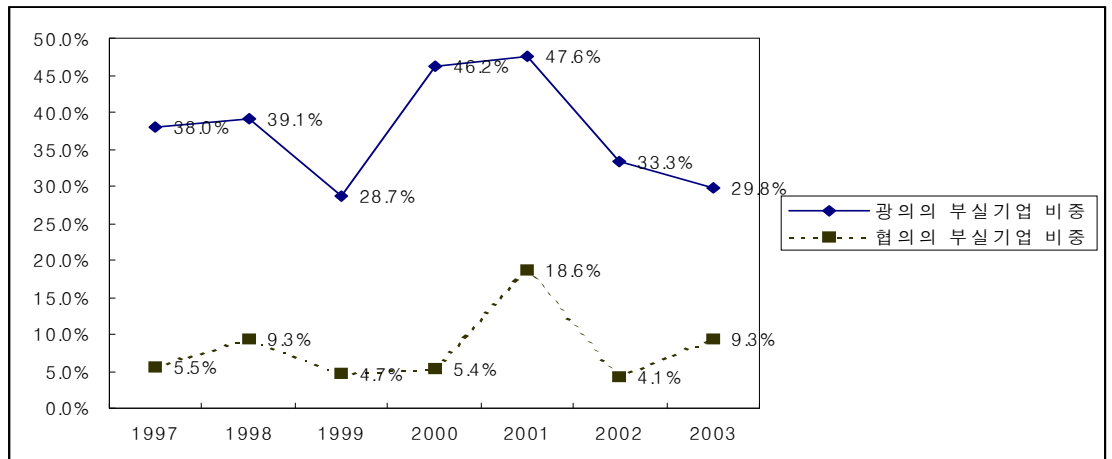
연도별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 연도별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여 연도별로 부실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00년과 2001년에 부실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은 진입 장벽이 완화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에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50%에 육박하였다가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차츰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은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급증하여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18.6%를 차지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는 다시 비중이 줄어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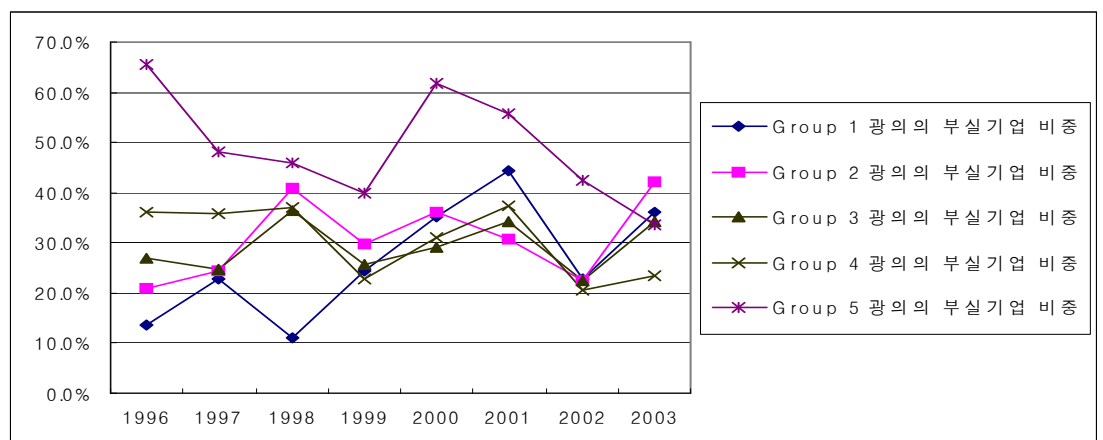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 자본금 규모별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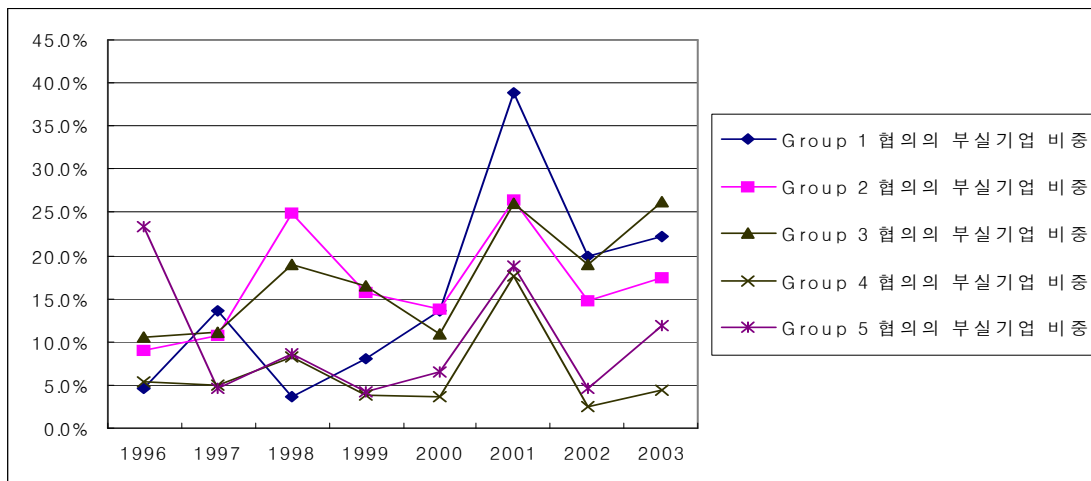
- 자본금 규모별로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매년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모든 그룹에서 비슷하게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자본금 규모별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 특히 2000~2001년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 집단은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50%를 훨씬 넘어섰음.

<그림 6> 자본금 규모별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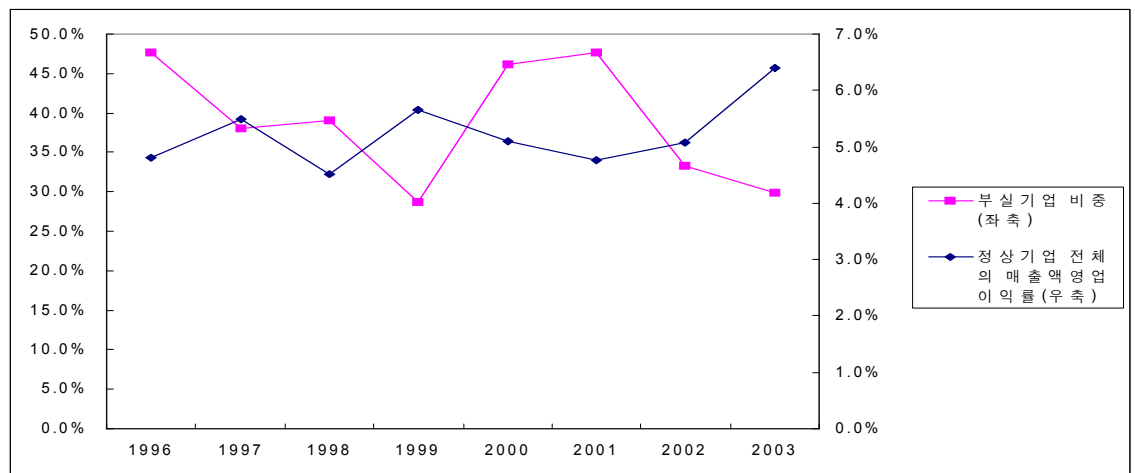


- 자본금 규모별로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모든 Group에서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높았음.
 - 자본금 규모가 큰 Group 1, 2, 3보다는 오히려 자본금 규모가 적은 Group 4, 5의 부실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현상을 보였으며, 자본금 규모 1,000억원 이상 집단인 Group 1의 경우 2000년부터 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높아졌음.
 -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기업(Group 1, 2, 3)은 부실기업 비중이 높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고(2003년의 경우 광의의 부실기업 수는 98개사),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처럼 무자격 업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 5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업체 중 부실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자본금 규모 50억원 미만인 중소 건설업체(Group 4, 5) 가운데 광의의 부실기업은 3,232개사로 전체 부실기업 수 3,330개사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2003),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과제는 이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음.

부실기업 비중 변화가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

-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와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음.
- 이는 부실업체가 경쟁 메커니즘에서 도태되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면서 건전한 정상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됨.
- 한번 건설시장에 진입한 부실업체가 쉽게 퇴출되지 않고 정상기업의 수익성을 잠식하는 현상은 전체 건설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그림 7>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과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 부실기업 퇴출시 정상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

○ 매출액 개선 효과

- 광의의 부실기업이 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정상기업 1사당 평균 매출액 증가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8년 간 평균적으로 약 17.4%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 3>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가정 후 정상기업의 평균 매출액 변화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분	정상기업 평균 매출액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후 정상기업 평균 매출액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996	71,971	80,145	11.4
1997	76,896	86,985	13.1
1998	74,011	81,776	10.5
1999	42,267	55,656	31.7
2000	38,485	43,668	13.5
2001	24,986	33,663	34.7
2002	22,377	24,034	7.4
2003	17,592	20,520	16.6
전체 평균	46,073	53,306	17.4

○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

- 광의의 부실기업이 퇴출되었을 경우, 영업이익은 지난 8년 간 평균적으로 약 16.5%의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 4>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가정 후 정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변화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분	정상기업 평균 영업이익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후 정상기업 평균 영업이익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1996	3,463	3,856	11.4
1997	4,216	4,769	13.1
1998	3,347	3,698	10.5
1999	2,390	3,147	31.7
2000	1,817	1,936	6.5
2001	1,191	1,604	34.7
2002	1,134	1,218	7.4
2003	1,127	1,314	16.6
전체	2,336	2,693	16.5

주: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가정 후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증가 규모에 해당 연도 정상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증가될 영업이익 규모를 추정.

○ 자본금 규모별 영업이익 개선효과

-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자본금 규모별로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기업 규모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Group 1) 상대적으로 적은 15.8%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Group에서는 모두 30% 이상의 높은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 건전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업체의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줌.

<표 5> 규모별 정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변화(2002년 기준)

(단위 : 개사, 백만원, %)

group	정상기업 수	정상기업 평균 영업이익	광의의 부실기업 퇴출 후 정상기업 평균 영업이익
I	27	160,197	185,444(15.8)
II	90	15,221	20,521(34.8)
III	82	6,305	8,900(41.2)
IV	3,315	421	568(34.8)
V	3,503	99	132(32.7)

주: ()은 증가율.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실 건설업체 수 변화 추이

- 1999년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2000년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2000년, 2001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현상의 이면에는 정상업체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부실업체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
- 본 연구에서 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완화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에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전체 일반 건설업체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였다가,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차츰 줄어들었음.

- 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업체 수가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18.6%를 차지했으며,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비중이 줄어들었음.

부실업체의 정상업체 수익성 잠식 문제

-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와 서로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었음.
- 광의의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정상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출액은 정상기업 1사당 연평균 17.4%, 영업이익은 정상기업 1사당 연평균 16.5%의 개선효과가 있었음.

정책적 시사점

- 무자격업체나 부실업체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이들 업체가 정상업체의 수주 기반이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임.
 - 무자격·부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요인인 요행에 의한 입찰제도,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등과 같은 진입 장벽 완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무자격·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공사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함.

- 다수의 무자격·부실업체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 물량의 확대는 오히려 정상기업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무자격·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을 전제로 한 중소건설업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상호 (선임연구위원·shlee@cerik.re.kr)

이홍일 (책임연구위원·hilee@cerik.re.kr)